

금속노조

7-15 총파업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대책, AI를 비롯한 산업전환·기술 혁신 노동 대책, 취약한 내수 기반 극복,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점점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해결, 기업 단위 교섭을 넘어선 '초기업교섭'으로!
'근로계약' 체결자만 사용자? 실질 지배·결정력을 쥔 사용자와의 '원청교섭'으로!

금속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 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AI가 노동자를 통제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도입과 활용은 인간 중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도입 전 노사 공동 영향평가와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AI 수집하는 정보와 알고리즘 운영 방식 공개, AI 활용 인사조치기준 공개를 요구합니다.

·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공동대정부요구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 전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업교섭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앙교섭·집단교섭의 효력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제도 마련, 교섭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 핵심 요구입니다.

· 정년 연장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1,540원(월급 260만 8,040원) 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비정규직 권리 보장과 원청교섭

간접고용·하청이주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과 해고·불이익을 금지해야 합니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하청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시 원청의 연대책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정책 및 제도 마련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며, 초기업별 교섭 단위 결정 제도 마련, 초기업 교섭 참여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및 노사 단체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참여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폐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 안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교섭 창구를 의무적으로 통일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체 구성

산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 및 점검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산업-업종의 여러 층으로 구성된 노정, 노사정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조선 노사정 협의구조 마련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K-스틸법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조 참여 보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동조합 참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제조업 부실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먹튀 행위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의 피해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의 투기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을 예방하는 각종 규제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하청·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작업중지권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타임오프 상한제 철폐 및 기준제·노사자율제로의 전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근로시간 면제 상한을 없애고, 한도를 기준으로 바꾸는 '기준제', 노사 간 단체교섭 및 자율적 합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노사자율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 방식, 임금체계 개악 없는 방식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며, 낮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상향해야 합니다.



2026년,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1차 총파업 7.15(수) 2차 파업 8.26(수) 3차 파업 9.2(수)